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2023 - 2027)

2023. 7.

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배경 ····· 1

Ⅱ. 정책환경 ····· 2

Ⅲ. 그간의 성과 및 개선방향 ····· 6

Ⅳ. 비전 및 추진과제 ····· 11

Ⅴ.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 14

1. 【수요대응】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 14
2. 【수요대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 18
3. 【수요대응】 민간형 취·창업 지원 강화 ····· 21
4. 【공급혁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 26
5, 【기반강화】 안정적 제도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 29

Ⅰ. 추진배경

□ 수립 배경

○ ‘천만 노인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환경 변화**에 맞는 향후 **5년간의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방향** 수립 필요

○ **정부 국정과제**에 제시된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 확대**’ 등의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

※ 국정과제 45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 제1~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 】

○ 「**노인일자리 종합계획**(’13～’17)」

- ’17년까지 노인일자리 매년 5만개씩 확충, 참여기간과 보수 확대 등 추진

비전 : “노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

3대 영역(9개 과제) ①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②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③ 민간분야 노인 취창업 활성화

○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18~’22)」

- ’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로 확대, 참여자 역량 기반 일자리 제공 등 추진

비전 : “보람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

4대 영역(19개 과제) ① 참여자 역량·보호 강화 ② 인프라 강화
③ 안정된 민간일자리 확대 ④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 그간 추진 경과

○ **(정책연구)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 ’22.4~12.)

○ **(TF 운영) ‘노인일자리 확충 및 내실화 추진 TF’**(’21.1~12.) 및 **종합계획(안) 과제 도출을 위한 TF***(’22.6~9.) **구성·운영**

* (주요내용) 사업구조 개편, 재정효율화, 인프라혁신 등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

○ **(의견수렴)** 현장·지자체 **간담회**, 관계부처·기관 회람 및 전문가 자문(’23.2~4.), **대국민 공청회**(’23.5.15.), 당정협의 실시(’23.5.30.)

Ⅱ. 정책환경

1 정책 추진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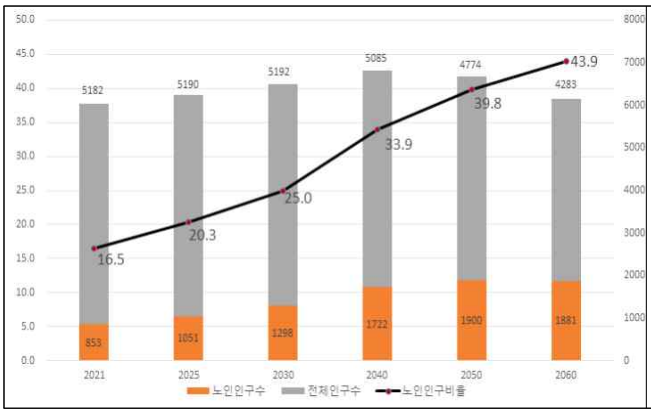
1. 2025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도래

1 초고령사회 진입 및 이후에도 노인 비중 지속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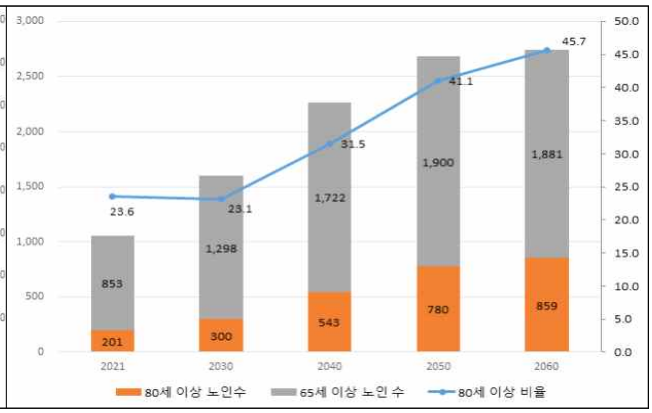
○ ’25년부터 전체인구 중 노인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27, 1,167만명), 이후에도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

○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도 ’10년 16.9%에서 ’21년 23.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40년 31.5%)

<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추계 >



< 초고령인구(80세 이상) 구성비 추계 >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21~2060」

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집단 다양화

○ ‘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697만명)가 노년기에 진입하면서 **노인 일자리 참여대상 집단**이 단일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로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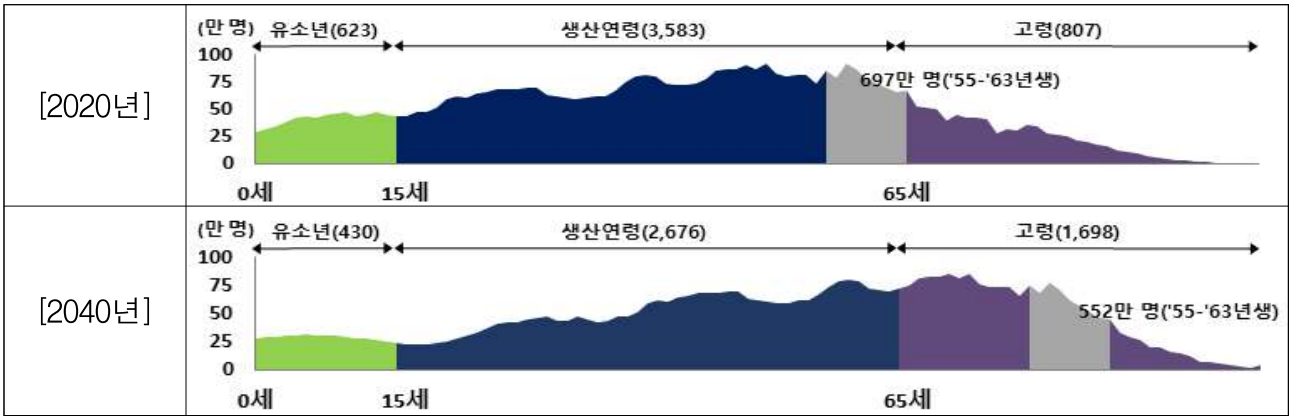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 현 노년층에 비해 경제적 자립능력, 학력 등 **인적 역량이 높으나**, 가족부양 부담 등으로 **노후준비는 불충분**해 **노동 참여의사가 높음**

* 1955~1963년생, 약 69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3.9%

- 이들은 **학력 수준**과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등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 높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

▶ **(후기고령층)** 고용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근로 취약계층이 다수**로, 취업 및 근로에 대한 수요보다 **복지적 수요가 큰 집단**

< 신노년세대 규모 및 노년기 진입 전망 >



* 통계청, 「내외국인 인구전망(2020~2040)」

2. 노후소득보장 체계 미성숙

1 공적연금 수급 개선에도 여전히 노후소득 불안정

○ 그간 **노인 빈곤 수준의 지속적 개선**에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20, 14.9%)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17, 42.3% → '21, 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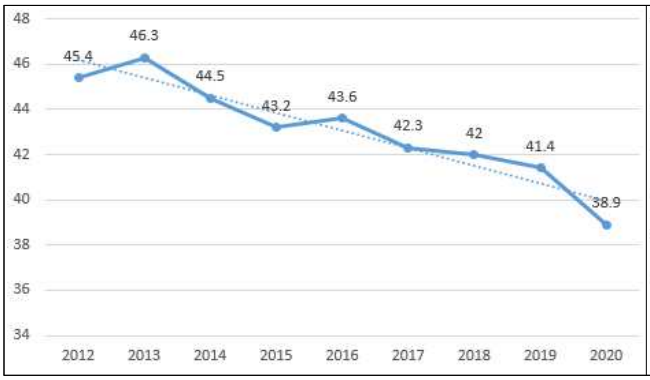
* 일하는 노인이 현재 일을 하는 이유는 생계비 마련이 73.9%('20, 노인실태조사)

○ **노령연금 수급자**는 **'23년 527만 명**에서 **제도 성숙, 고령화 진전** 등으로 **'30년 761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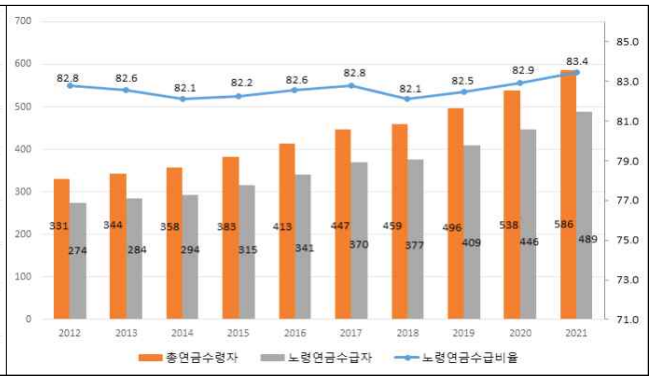
- 현 제도상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간 **소득 공백기**가 여전히 존재하며, **은퇴 연령 고려 시 소득절벽 위험은 더욱 커질 가능성**

* 법정 정년은 60세이나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33년까지 65세로 조정, 장년층(55~64세) 임금근로자의 권고퇴직 연령 51.8세(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노인빈곤율 추이 >



< 노령연금 수급률 변화 >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21)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2012-2021)」(2022)

2 지역 · 연령 특성에 따라 소득보장 수준에도 격차 발생

○ **지역별**로 **고령화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공적연금 수급률**에서도 **격차***가 발생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필요성 증대**

* (공적연금 수급률) 강원 43.9%(최저) vs 울산 52.6%(최고) ('21, KOSIS, 국민연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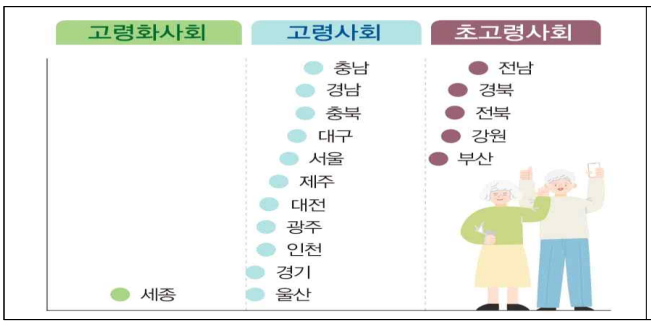
○ **연령대별**로 **현세대 후기고령층**(75세 이상)은 전기고령층(65~74세) 대비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 65-74세 29.4% vs 75-84세 50.3%, 85세 이상 54.3% ('20,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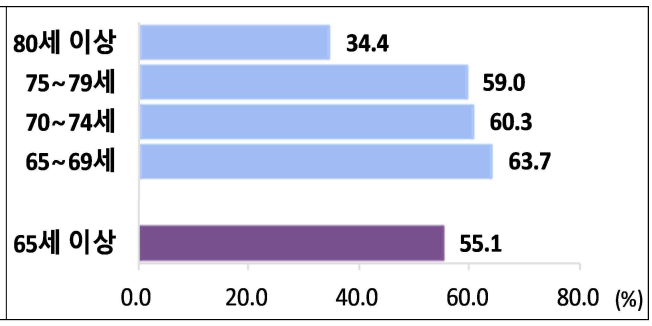
- **공적 소득보장이 충분치 않고**(低연금, 低소득) **은퇴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자리·복지 요구도 지속**

* (연령대별 공적연금 수급률) 65-74세 56.4%, 75세 이상 39.4%('21, KOSIS)

<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22) >



< 연령별 공적연금 수급률 격차('21) >



* 통계청, 2022년 고령자통계(「장래인구추계(시도): 2020~2050」,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등)

3. 노동시장에서 노인 인력의 중요성 증대

1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 우려

○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비중은 낮아지고 **장년층 이상 비중이 높아질 전망**

* 생산가능인구: ('22) 3,667.5만명 → ('27) 3,486.7만명 → ('30) 3,331만명,
이 중 청년층은 ('20) 19.9% → ('30) 14.7%, 50대 이상 장년층은 ('20) 45.8% → ('30) 55.0%

○ 이에 **노동시장**에서 **노인 인적자본에 대한 요구**는 **노동력 공급**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지속 증가**하는 상황

- **전 세계적**으로도 **노인의 경제·사회적 기여**로 **연간 1인당 GDP**가 **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UN 경제사회국(DESA), '23.2.)

② 노인의 취업수요를 충족하기에 일자리 질적 제고 부족

○ **65세 이상 노인의 취업률***은 '20년 **36.9%**로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노인은 **전체의 22.4%**('20, 노인실태조사)

* ('11) 34.0% → ('14) 28.9% → ('17) 30.9% → ('20) 36.9% ('20, 노인실태조사)

- **근로자 평균연령, 근속연수** 상승('21, 평균 7년) 등 **은퇴 시점이 늦춰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고령자 취업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노인 취업직종**은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임시직, 농림어업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등이 대다수로 **저임금 직종에 집중**

2 정책 대상자 분석

□ 노인의 근로 현황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인 취업자수)** 2,311천명('18) → 3,265천명('22)으로 최근 5년간 1.4배 증가

○ **(노인 고용률)**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취업자는 '22년 36.2%**

* ('18) 31.3% → ('19) 32.9% → ('20) 34.1% → ('21) 34.9% → ('22) 36.2%

□ 노인의 일자리 · 사회활동 참여 의사

○ **(향후 취업의사) 중고령층**(55-79세) 중 **장래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22년 68.5%**로 최근 10년간 지속 **증가 추세**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2022

** 이중 '생활비 보탬'이 39.2%로 가장 높고, '일하는 즐거움'이 23.8%

○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65세 이상**에서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사가 있다**는 비율 **12.6%**(60세 이상은 **16.5%**) * 통계청 2021 사회조사

○ **(노인일자리 참여 의사)** 전체 노인의 **22.4%**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음 * 2020년 노인실태조사

- 참여하고 싶은 사업유형으로는 **공익활동형이 58.9%로 가장 높음**

* 취·창업형 14.3%, 사회서비스형 10.1%, 시장형사업단 9.7%, 재능나눔활동 7.0%

Ⅲ. 그간의 성과 및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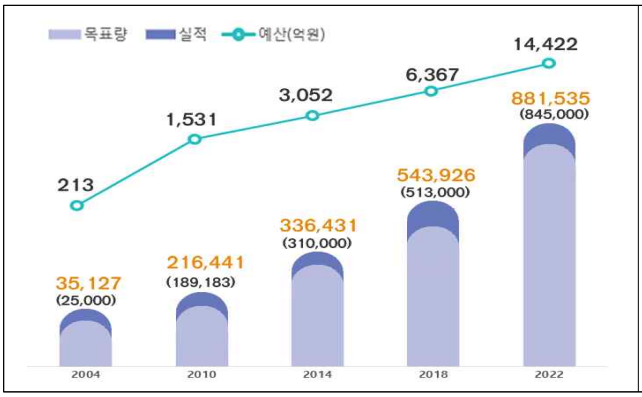
1 그간의 주요 성과

◈ 노인일자리 사업 20년, 양적 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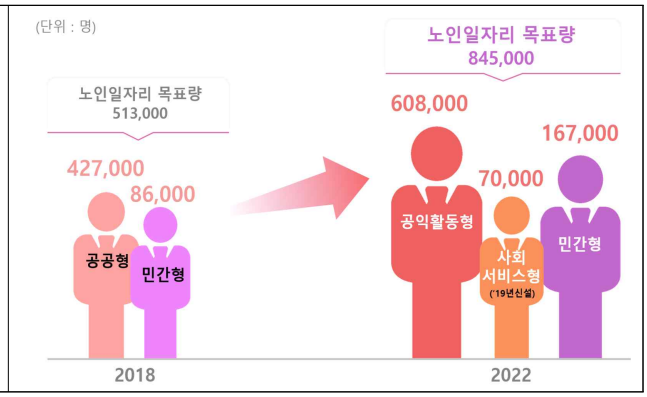
○ 그간 **노인일자리 수·예산 확대** 등 **지속적으로 외연 확장**

- 최근 10년간 **노인일자리 수 3.5배**('13, 24만명 → '22, 84.5만명), 예산은 5.8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

< 20년간 노인일자리 규모·예산 추이 >



< 노인일자리 유형별 증가 추이 >



○ **제1~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13, '18)을 통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유형 개발, 노인일자리 참여여건 개선 등 **제도가 발전해 왔음**

- **(공익활동형)** 참여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월 27만 원으로 인상**('17~)하여 저소득 노인 대상 **소득보장 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형) 민간 개입이 어려운** 영역(돌봄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등)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19~) 및 지속 확대*로 **노년층의 다양한 근로 욕구 충족**에 기여

  * 사회서비스형 규모 : ('19) 2.4만 → ('20) 4.6만 → ('21) 6.3만 → ('22) 7만 → ('23) 8.5만명

- **(민간형)** 소득수준이 높은 **민간영역 일자리 사업량*** 지속 확대

  * 민간형 규모 : ('17) 9.2만 → ('19) 10.9만 → ('21) 15만 → ('22) 16.7만 → ('23) 19만명

· **초기투자비** 지원 및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유도 등 **판로를 확보**하였으며, **취업형 일자리** 근로 여건도 지속 개선

< 취업형 일자리(시니어인턴십) 근로 여건 개선 성과 >

○ 채용노인 1인당 월평균 임금 상승 : ('17) 137만 원 → ('20) 194만 원
○ 취업유지율(계속고용률) 개선 : ('17) 91.4% → ('20) 96.3%

< 노인일자리 유형별 분류('23년) >

근로 능력 임금 수준	공공형 일자리(80%)		민간형 일자리(20%)
↑ 높음	사회서비스형(8만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5천개)	시니어인턴십(5.5만개) 취업알선형(8.8만개) 고령자친화기업(2천개) 시장형사업단(4.5만개)
낮음 ↓	공익활동형(60.8만개)		
	←사회 공헌적 ←정부에서 임금 지원		시장 친화적→ 시장에서 임금 지급→

◈ 노인 소득보충, 사회참여 활성화 등 질적 성과도 창출

○ **(경제적 효과) 심각한 노인빈곤율에 대응**('21, 37.6%), 노인일자리를 통한 **추가적인 소득 보전으로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

* 노인일자리 사업참여 전 대비 빈곤율 10.2%p 완화('2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공일자리**가 고령 취약계층(저학력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해, 60세 이상 고령층 노동이 **경제활동참가율을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

* ('15 대비 '22 경제활동참가율 기여도) 고령층(60세 이상) **1.06%p** 상승 vs 청년층(15~29세) 1.03%p, 핵심노동연령층(30~59세) 0.52%p('22,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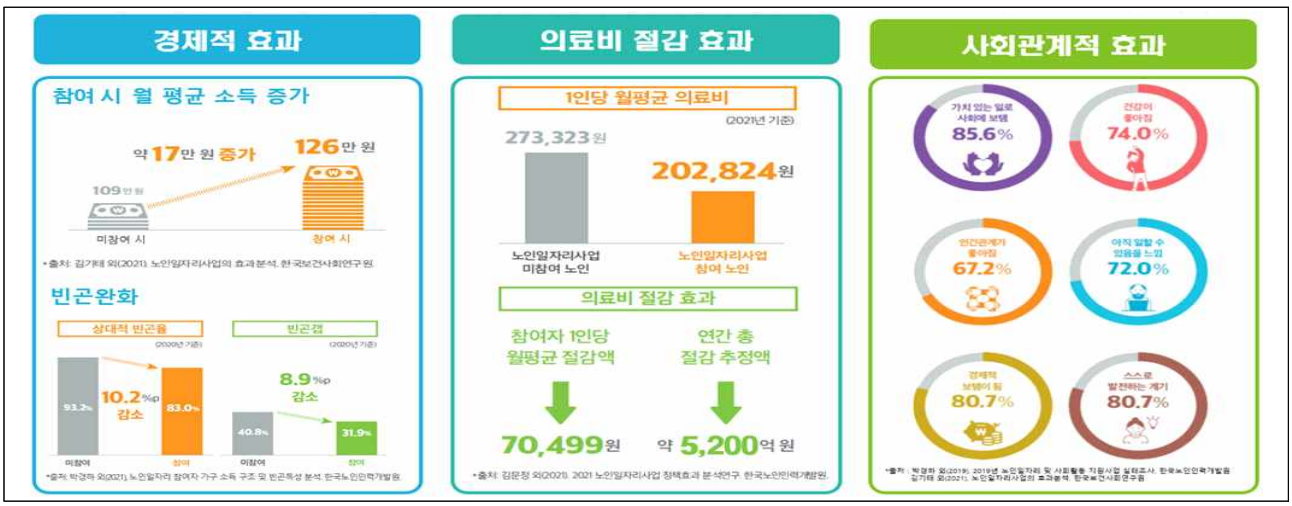
○ **(건강 향상) 노인의 근로와 사회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국가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연간 5,200억 원 절감 추정)

* (1인당 월평균 의료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 202,824원 vs 미참여자 : 273,323원

○ **(사회관계적 효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독거노인 등의 **소속감 제고 및 노인 우울감 해소 등 관계적 개선***

* (우울의심군 비율) 노인일자리 참여자 : 7.2% vs 미참여자 : 32.3% ('17, 개발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다양한 성과 >



2 한계 및 개선방향

◈ 사업 전반의 질적 고도화와 함께 정책환경 변화 대응 필요

○ **(질적 고도화)** 그간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확장**되면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질적 강화는 미흡'**했다는 비판

* 공공형 등 **단순 활동 위주**로 증가, **사업 내실화 필요**하다는 지적(국정감사 등)

- **노인일자리 사업**은 민간 노동시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후기고령층·근로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주된 기능**으로 하나,

- **저임금·단순** 노무 위주의 **일자리 확대**가 **참여노인의 자아실현 욕구, 노인의 역량·경험**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충족하지 못한 측면**

⇒ **정책목표**를 **'노년기 자아실현'**과 **'노후소득 보장'** 두 축으로 설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 재편 등 질적 고도화 추진**

○ **(환경변화 대응)** 지난 제2차 종합계획으로 다양한 개선을 모색하였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대거 유입**(신노년세대) 등 **대응에는 역부족**

- **지역 특성·인구구조 등이 다양화**되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역사회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지원체계 필요성도 증대**

⇒ **'신노년세대 등장'**과 **'지역사회 수요 다양화'** 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 공익활동형에 대한 상반된 요구 반영 필요

○ **(수요 대응 한계) 단순 노무·활동 비중 급증***으로 **다양한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 질**에 대한 논란 발생

* 공익활동형 중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비중 : ('17) 34.3% → ('20) 43.6% → ('22) 46%

○ **(규모·단가)**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여수요 미충족**, 참여수당은 **목표 대비 인상 폭이 미미***해 소득보장 기능 제한

* 제1차 월 30만원, 제2차 월 40만원 목표했으나 월 27만원 수준에서 정체('17~)

○ **(지역·연령 특성 고려)** 수요처·민간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전환**이나 **확대**가 **곤란**

* 환경개선 등 비중은 강원(66.8%), 전북(56.5%), 경북(54.6%), 제주(53.0%), 전남(52.3%), 경남(49.6%) 순 → **농어촌 지역은 환경개선 등 프로그램의 의존도가 높은 편**

- **후기고령층의 근로 능력을 감안**하여 **사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도 대응 필요**('22, 공익활동 참여자 평균연령 77.0세)

현장의 목소리

○ 농어촌 지역은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일자리 활동처가 부족**해 공익활동형 수요가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 참여자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처럼 근무시간이 긴 일자리 참여**는 어려워,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공익활동형이 축소되면 **고령자의 빈곤 악화**와 **사회참여 단절**이 우려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제도적 안착 및 수행체계 개선 필요

○ **(제도보완 필요) 사회서비스형**은 **전문성·근로강도** 기반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활동**을 특성화하는 취지로 신설되었으나,

- 사업내용의 유사성으로 **공익활동형과 차별성이 부족**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현장 지향적 사업유형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에 한계

* (예)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활동 보조 업무는 공익활동과 매우 유사

○ **(수행체계) 사회서비스형**('19~) 및 **선도모델 사업**('22~) 등 현행 **중앙 중심의 모형 발굴**만으로는 안정적·지속가능한 수행 곤란

◈ 민간형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

○ **(규모·단가)** 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19%** 수준으로, 베이비붐 세대 등 **수요 대응**을 위해 **비중 확대 필요**

- **시장형 사업단** 등 창업형 일자리는 **초기 진입부터 자립까지** 일정 성숙 기간을 요하므로 **단기간에 수익 발생이 어려우나**, 이를 충당하기에 **지원 단가는 낮아 초기 정착에 어려움 발생**

  * 공익활동형 월 27만원 vs 시장형 사업단 월 26.7만원(연 267만원/10개월)

- 시니어인턴십 등 취업형도 참여기간, 평균급여 등 **근로여건 개선 필요**

○ **(제도 질적 정체)** 생산품 **품질 저하, 판로개척의 한계** 등으로 **창업형 일자리**(시장형사업단 등) **시장경쟁력 저조**

- **취업형** 일자리도 **참여자 역량**에 맞는 일자리 매칭 제한, 기업 참여 유인 부족으로 **단순 직무** 편중* 등 **역량 있는 노인 수요 충족에 한계**

  * 시니어인턴십 직종 중 '사업시설관리 등 서비스업': ('17) 20.6% → ('20) 24.4%

◈ 체계적 · 안정적 정책운영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필요

○ **(법적 근거)** 노인일자리 사업의 제도화에 따라 **법적 근거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국회 계류 중으로 **사업 추진동력 부족**

  * ①사업 규모 급증에도 노인복지법 일부 조항(제23조) 및 자체 지침으로 운영, ②사업 총괄 지원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법적 기반 부족 등

○ **(담당자 처우)** 그간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노력**(배치기준 완화, 급여인상 등)에도 **현장의 요구는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

  * 고용안정성 부족('21년 담당자 70.6%가 3년 이하 근무, 단기계약직 약 87%) 등

○ **(수행기관)** **사업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수행기관 수는 정체**(('10) 1,136개 → ('22) 1,300개)되어 수행기관의 **업무부담 가중**

○ **(지원 인프라)** **욕구 조사, 상담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및** 양질의 **역량개발 교육** 등을 수행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 **교육 지원** 등 **수행기관·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체계**도 미비

Ⅳ. 비전 및 추진과제

비 전	노년기 일과 사회참여로 존엄한 노후, 건강한 삶, 노년기 자아실현 달성
목 표	▪ 천만 노인시대, 노인인구 10% 수준 일자리 창출 지원 ▪ 신노년세대 수요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다양성 강화 ▪ 공급혁신 및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전 략			추진과제
수요대응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1 수요에 대응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운영 2 공익활동형 질적 내실화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1 사회서비스형 비중 확대 및 제도 개편 2 지역 문제해결 등 사회서비스 신규영역 발굴 3 민·관 협력형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활성화 4 참여자 직무교육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
	3	민간형 취·창업 지원 강화	1 민간기업·구직노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강화 2 다양한 근무조건·직종의 민간일자리 활성화 3 창업형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 기반 마련 4 비즈니스 단계별 성장지원 서비스 강화 5 민간형 일자리 사업 개선 방향 검토
공급혁신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1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 2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수행체계 활성화 3 담당자·수행기관 등 역량 강화 4 담당자 고용 안정성 및 처우개선
기반강화	5	안정적 제도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1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법 제정 2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구축 3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4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관협력 강화 5 참여자 및 수행기관 등 안전관리 강화

【 향후 5년, 노인일자리 기본 추진방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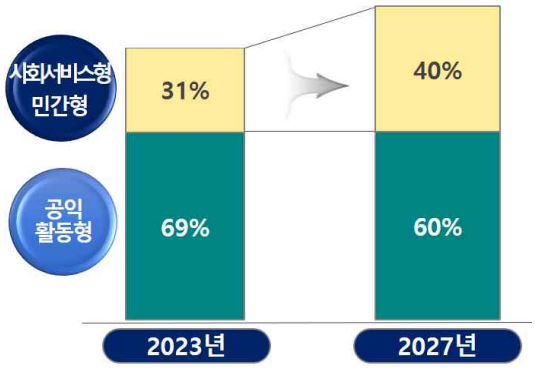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충 지속

○ '27년 노인인구의 10% 수준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여 초고령사회와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

* 65세 이상 인구 : ('23) 950만 명 → ('27) 1,167만 명(예상)

○ 경험·역량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확충 ⇒ '27년 40% 이상으로 비중 확대('23, 31.1%)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수요 대응 방향(안) >



▷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 ('23) 31% → **('27) 40% 이상으로 확대**

▷ **공익활동형 일자리**

- **저소득, 75세 이상 근로취약계층** 등의 **소득보장 기능** 및 농어촌 등 민간일자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정 수준 유지**

* 전체에서의 비중은 낮아지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

◈ 참여자 특성 · 수요에 맞춘 일자리 유형 구조화

○ 소득보장 기능, 신노년세대 역량·경험 활용한 사회참여 확대 등 정책목표와 대상에 따라 사업유형 구조화 추진

- 일자리 단가 산출방식 개선 및 근무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 연령대(전기-후기고령층), 역량 등 세대 특성(베이비붐 세대-현 노년층), 지역 여건(도시-농어촌) 등을 고려해 일자리 유형의 스펙트럼 확장

일자리 유형	정책 목표	정책 대상
공익활동형	취약노인의 노후소득 보완	▪ 경제적 취약계층(저소득) ▪ 초고령 등 근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자아실현·사회기여 (역량 증진, 경험 활용)	▪ 역량·경험 多 인적 자본 ▪ 사회참여 욕구 有 ▪ 연소 고령층
민간형	자아실현 (취·창업의 디딤돌)	▪ 역량· 경험 多 인적 자본 ▪ 연소 고령층

【 '보건복지서비스 약자'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중점 확대 분야 】

1 취약 어르신 식사·여가 등 지원 확대

○ **(식사* 지원) 취약계층 식사제공** 사업(푸드뱅크 등), **경로식당·도시락 배달 운영기관**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연계** 및 **신규 사업단 육성**

* **'식사 준비'**는 **노인 일상생활** 중 **가장 도움이 필요한 활동**(11.9%)('20, 노인실태조사)

○ **(경로당 지원) 노인일자리** 활용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위한 **식사·청소 지원 확대** 및 **여가·교육·운동 등 프로그램 확산**

< '27년까지 취약계층 어르신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목표 >

○ **(식사 지원)** 600개소(식사서비스 제공기관의 30%) x 평균 48명 = **28,800명** 투입

○ **(경로당 지원) 경로당 식사·청소 지원 일자리* 및** 여가·교육·운동 등 프로그램** 확대

-* ('23) 5.8만명 → **('24) 6.8만명** / ** ('21) 6,608개 → **('24) 8,000개**

2 아동·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아동 돌봄)** 맞벌이·한부모 등 **증가하는 초등돌봄 수요**에 대응해, 교육부 협업*으로 **학교 내 노인일자리 연계 확대 추진**

* '늘봄학교' 사업 모형 개발('23~)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교육(지)청 매칭 확대 지원('24~) → 전국 초등학교에 노인일자리 인력 투입('25)

○ **(노인 돌봄) '노노케어'**-유사 사업 간 **중복지원 제한 완화**해 **수혜 확대**, 노인 돌봄 관련 시범사업* 연계 등 **두터운 돌봄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

< '27년까지 아동·노인 돌봄 노인일자리 확대 목표 >

○ **(아동)** 전국 초등학교 약 6,000개 x 노인일자리 참여 인력 5명 ⇒ **3만 명 목표**

○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시범사업 지자체·기관 수요 파악 후 **노인일자리 인력 투입**

3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지원 확대

○ **노후 경로당** 등 **취약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시설 점검**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사업 확대** → 성과평가 후 타 취약시설 확대 검토

< '27년까지 경로당 안전 점검 노인일자리 확대 목표 >

○ **('23) 210명** → ('24) 약 460명(229개 시군구당 2명) → **('27) 1,000명 목표**

Ⅴ. 추진과제별 세부내용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1. 수요에 대응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운영

1 저소득 · 고령층 소득보장 요구에 지속 대응

○ **(양적 조정) 저소득·후기고령층 소득보장** 수요에 **지속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익활동형 일자리 수요 충족**

- 공익활동형 일자리 수는 증가시키되,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 세대 수요**에 맞추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 확대**

○ **(참여수당 현실화) 소득보장 기능** 강화 및 **물가상승** 수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적정 활동비 산출 및 지원**

- **(현행)** 활동실비 등을 지침으로 정하는 현행 활동비 책정 방식은 **물가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아 **활동의 실제 가치 반영 곤란***

  * 활동실비(시간당 6천원)는 '21년 최저임금의 70%에서 '22년 66.5%로 하락

- **(개선)** 최저임금 수준 보장을 위해 매년 **물가상승 연동**한 **참여수당 단가 산출**

< 공익활동형 적정 참여수당 산출(안) >

▶ **(기존)** 교통비 + (활동실비 × 활동시간) + 간식비 ('23, 월 27만원)
▶ **(개선)** 월 27만 원(현행단가) × 연 3.3%*
  * 최근 3년간 매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 상승률
  ** '23년 월 27만 원 기준, '27년까지 매년 약 1만 원 인상 필요('27, 월 31만원)

2 수요 특성을 반영한 배분 · 선발 기준 마련

○ **(배분기준 개선)** 농어촌 지역 특성 반영한 **프로그램 권고 비율** 마련

- 도시-농어촌 **인프라** 및 사업유형에 대한 **지역적 수요**, 참여자 활동 가능한 **프로그램 유형** 등 분석하여 **사업량 배분 기준 반영**

  * (추진방안) ①도시 지역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확대량을 감안해 공익활동형 배분 조정, ②농어촌 지역은 활동처 부족 등 지역 인프라 고려하여 적정 유지

○ **(선발기준 개편) 민간 취업 능력은 낮으나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후기고령층*, 근로취약 등) 보호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 (참여자 평균연령) 공익활동형 76.6세, 사회서비스형 70.9세, 시장형사업단 71.0세, 기타 민간형 65~67.6세(공익활동형은 70세 이상이 약 90%)

< 공익활동형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안) >

현재 기준('23)	개편방안
▶소득인정액 10개 구간 배점 적용(총 65점) ▶가구특성별 차등화	▶소득인정액 구간 간소화 ▶세부 프로그램별 활동 난이도 등 고려 ▶연령 관련 가점 기준 등

○ **(근무기간 확대)** 연중 **중단없는 공익활동 참여**로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근무기간 확대**(현행 평균 11개월 → 12개월) 추진

2. 공익활동형 질적 내실화

1 정책목표 · 대상 중심으로 세부 유형 재편

○ **(분류체계 개편)** 공익활동형 일자리 **세부 유형**(프로그램)의 **분류 재배치** 및 전환 등 검토

< 현황 > **공공형 일자리**(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를 **적정 강도·근무시간·전문성** 등으로 **재구성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 존재

< 현장의 목소리 >

"**공익활동형 유형**마다 **활동 강도나 난이도**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 활동시간**(월 30시간), **동일 수당**(월 27만원)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민원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도서관 봉사 등 **일부 프로그램**은 **지역·수행기관마다 다르게 구분**되기도..."

- 활동 강도, 전문성을 고려한 '(가칭)**공익활동형 선도모델**(심화형)'* **신설** 및 프로그램 안착 이후 **사회서비스형으로 연계**

*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유사 영역 중 공익성, 활동 난이도, 강도 등이 높은 유형을 재분류해 시간·단가 등 확대한 활동(월 40시간 이상, 최저임금 보장)

-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 신설

< 공익활동형 유형 분류체계 개편(안) >

유형	현 사업내용('23)	개편방안
노노케어	·취약노인 가정 방문하여 안부확인, 생활 안전 점검 등 서비스 제공	·**공익활동형(일반형) 유지** 및 취약노인 보호를 위한 비중 확대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상담·교육, 정서적 지원 등	·**공익활동형 선도모델(심화형) 전환**
공공시설 봉사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 시설, 지역 주거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근로강도 높은 유형(학교, 어린이집 지원 등)은 **공익활동형 선도모델(심화형) 전환** ·보건소, 공원, 도서관,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등은 **공익활동형(일반형) 유지** -자원순환 활동 관련 세부 유형 **신설**
경륜전수 활동	·경험,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과 공유	·**공익활동형(일반형) 유지** 및 사회참여 강화를 위한 비중 확대

○ **(일자리 유형 간 연계) 참여자 생애주기 및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 유형 간 **전환·이동 활성화**

- 수행기관은 참여자 연령·건강·역량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필요시 타 유형 전환** 등이 이루어지도록 **참여자 중간점검 실시**

*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의 경우 참여자의 고연령·건강 저하 등 감안해 공익활동형 전환

2 공익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우수프로그램 확대) 돌봄 사각지대 완화**(노노케어),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 높은 일자리 발굴** 및 **우수프로그램 전환 지원**

- 공익활동 내 환경개선 프로그램 등 **단순 활동**을 **돌봄·안전·탄소 제로** 등 **공익적 가치**가 **더 높은 유형**으로 전환*

* (예) 저탄소 전환 등 자원순환 프로그램(종이팩 재활용, 해양폐기물 수거 등)

- 취약노인과 사회를 잇는 **'노노케어'**, 노인의 경험을 공동체와 나누는 **'경륜전수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유형** 중심으로 확산

< 돌봄·안전 관련 우수프로그램 개발 예시 >

□ **(노노케어)** 다양한 형태의 노인 돌봄 지원 등 노노케어 프로그램 다양화

□ **(디지털 노노교실)** 디지털 중심 사회에서 노인층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노노케어 개발(키오스크, 앱, 온라인 공공서비스 신청 교육,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등)

□ **(기타 프로그램)** ▲불법촬영 점검, ▲학교 방역, ▲전기차충전소 지킴이, ▲독립운동가 발굴 등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농촌·해양 폐기물 수거	
독거, 거동 불편 어르신 **빨래**를 **수거**해 **세탁·건조·배달 및 안부확인**		종이팩 수거 세척 건조 후 제지업체 휴지와 교환하여 취약계층 지원		농약병, 폐비닐 폐그물 등 수거·분리해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 지원	

- 수행기관 인센티브, 우수사례 매뉴얼 제작, 중앙 지원기관 기능 강화 등 통해 **우수 공익활동 모형 발굴·확산**

  * '노인일자리 아이템 발굴' 공모전 및 수상사례 지자체 설명회 및 홍보물 배포 등

○ **(프로그램 다양화 유도)**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 자율형 활동'** 유형 신설 검토

  * (예) 지역 공익활동 배분량 중 일정 범위 내에서 참여시간·수당 등 활동 조건을 차등화하여 공익활동 유형 개발 및 중앙 승인을 거쳐 운영

-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개인의 자발적 참여**방식(자조모임 등)을 접목해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회활동 프로그램 발굴

  * 사회참여 활동으로서 재능나눔, 자원봉사와의 중복 및 관계 설정 등 검토

< 자발적 참여 기반 공익활동 사례 >

▸ **(예)** ①노원구 돌봄 공동체 : 노인들이 건강증진 활동·한글·요리교실 등 참여자·제공자로 역할하며 자발적 참여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내 공동체, ②통영시 해양보호구역 관리 사업 : 마을 자원, 해양생태계 보호 위해 해양 정화활동 실시 및 시간당 1만원 지급

건강관리		건강증진활동		폐의약품 관련 상담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1 사회서비스형 비중 확대 및 제도 개편

○ **(비중 확대)**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양적 확충**

- **전체 노인일자리 중 사회서비스형** 비중을 '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 병행 추진

○ **(제도 개편)** 근무기간 확대 및 소득 기준 외에도 **활동역량,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

- 연중 중단없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해 지침상 **근무기간 확대**(현행 운영기간 10개월 → 11개월)

- 참여자 선발기준 지침에 ①**관련 분야 경험, 경력**(일정 기간 이상 등) **지표**, ②사업 **적합 자격증 가점 확대** 등 검토

<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선발기준 개선(안) >

현행		개편(안)	
항목	점수	항목	점수
-		▶ 직업 경력 필수 항목 신설	10
▶ 선택항목 - 사무역량(컴퓨터 활용능력, 정보검색 능력) - 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협조적 관계 등)	40	▶ 사무역량 필수 항목화	10
		▶ 선택항목 유지(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	20
▶ 유관 자격증 가점	10	▶ 유관 자격증 가점 점수 상향	15

2 지역 문제해결 등 사회서비스 신규영역 발굴

○ **(지역사회 문제해결) 돌봄 수요 충족,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발굴 지속*

* 돌봄 시설 연계 일자리 수 : ('21) 367명 → ('22) 6,018명

- 지역 내 돌봄 시설(지역아동센터, 희망쉼터 등)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도서관, 보건소, 문화재 시설 등)과 연계 확대

> ▸ **(예: 늘봄학교 돌봄지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늘봄학교 **아침·저녁·틈새 돌봄** 지원 및 **등·하교 안전관리** 등 지원('23, 6개 늘봄학교, 26명)

○ **(공공기관 협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 및 직무개발 확대**

> ▸ **(예: 시니어 시설안전점검원) 국토부**(국토안전관리원) **연계,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스마트 앱으로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사후관리 지원**('23, 210명)
> ▸ **(예: 시니어 연금 가이드)** 연금공단 연계, 대면 방문 비중 높은 고령층 민원 대응

○ **(사회서비스 종사자 등 연계)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영역***에 관련 **전문 교육 이수** 또는 **자격 보유**한 참여자가 **업무 보완 역할**

* 돌봄, 상담 및 재활, 건강, 교육, 문화·체육 등

-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원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요처 확대**

3 민·관 협력형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활성화

○ **(규모 확충)** 기업 사회공헌 기금 등 **외부자원**과 **공적 지원**(예산)을 매칭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지속 확충

* 공공이 월 32만원/5개월 지원, 참여기업은 월 72만원 이상 급여 지급 필수

○ **(참여기업 확대) 참여 유도, 전략적 홍보** 등 **공공·민간 참여 확장**

- **'선도모델 사업참여'**가 **기업의 'ESG 경영성과'로 직결**될 수 있도록 **ESG 성과지표 개발** → 선도모델 모형을 평가(ESG 전문협의체)하여 기업이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표준화 모형 선정·전국 보급**

* (성과지표(안)) 목표 달성률, 전략적 사회공헌, 인적 ESG생산성, 탄소발생저감률 등

< 표준화 모형 선정 및 확산 추진단계(안) >

성과지표 개발	사업평가	전국화 확대
· 선도모델 추진사례 분석을 통해 성과측정지표 개발 * E(환경, 에너지), S(돌봄, 안전), G(경영, 자문)	· 성과지표 연계하여 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시행 · 평가결과 기반 표준화 모형 선정	· 대표 표준화 모형 사례집 제작 · 외부 기금사업 등 사업홍보 및 전국화 확대 추진

- **기업 '사회공헌팀'** 대상 **정기적 참여 모집,** 기업 협회 협력을 통한 집중 홍보, **전국 설명회** 개최 등 사업 인지도 제고

* 평가결과 우수 10대 기업 선정, 포상 및 인센티브 반영 등 유인기제 마련

○ **(우수사례 확산) 사회서비스 영역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 개발 및 확산

- 기업 자원, ESG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영역 및 사례 발굴

▪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지역 내 폐광지역 생태환경 보전 및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 (외부자원 규모) 14.3억, (임금 수준) 월 118만원(8개월), 142명 ▪ **(LH)** LH임대주택 거주하는 독거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외부자원 규모) 5.4억, (임금 수준) 월 72만원(5개월), 129명

○ **(사업운영 체계화)** ESG 성과지표 기반으로 **사업영역**(참여기업)·**추진방식 명확화** 및 효율적 **실적관리** 등

- **사업 안정화** 및 **단계별 전문적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전담팀 구성·운영** 추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지원내용) ①참여기업 발굴 및 사업제안, ②외부자원 조달·확보, ③수행방식 선정 및 사업신청, ④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사회공헌 연계 활성화) 기업 사회공헌**을 거시적이고 **전체적 관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협약** 등 **연계·협력 강화**

4 참여자 직무교육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

○ **(직무교육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돌봄, 요양 등 중심으로 **노인 적합 직종 개발** 및 참여자를 위한 **직무교육 지원**

- 신규 사업('22, 32개) 중심으로 직무 매뉴얼 개발, 교육과정 표준화 등 **단계별 직무교육 지원체계 마련**

< 참여자 직무교육 지원체계 추진방안 >

▪ **(1단계)** 신규사업 참여자 **직무 매뉴얼 개발** ▪ **(2단계)** 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화**(공공기관 협업사업 수요조사 등 반영) ▪ **(3단계)** 지역본부 연계 **참여자 직무교육 운영**

○ **(지침 개선)** 참여자 직무교육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행체계별 역할 명확화**(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안내 개선 등)

3 민간형 취·창업 지원 강화

1 민간기업 · 구직노인에 대한 직 · 간접적 지원 강화

○ **(장기고용 유도)** 시니어인턴십으로 **경험이 축적된 노인**이 인턴십 수료 이후에도 **지속 고용**될 수 있도록 **'장기취업유지형'** 지원 **확대**

- **(기존)** 18개월 이상 장기고용 이후 1회 지원(90만원/1인)
  → **(개선) 지원 횟수 및 규모**(2차년 160만 원, 3차년 120만 원) **확대**

< 시니어인턴십 '장기취업유지형' 지원금 확대 내용(단위: 원/1인당) >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기존	2,400,000	-	900,000	-	-	-
개선	2,400,000	-	800,000	800,000	600,000	600,000

○ **(온라인 플랫폼 활용)** **노인**(공급자)과 **구인기업**(수요자)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방식 도입하여 사업 효율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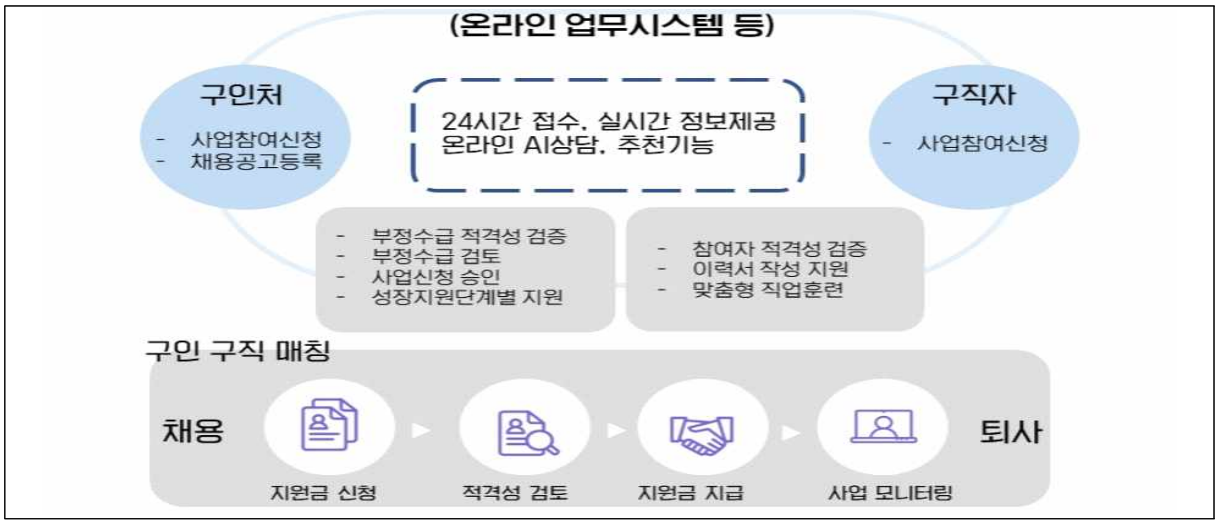
* (추진방안) 기존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사업량은 민간 수행기관에 위탁, 추가 증가량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 추진

- **온라인 플랫폼 직접신청 방식**을 추가적으로 운영해 수행기관 중간 관리비용 절감 및 **구인-구직 정보 매칭 활성화**

* (예) 노인일자리 여기(구인정보 제공)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수행기관) 통합

- 고용서비스 플랫폼(워크넷 등) 연계하여 **참여기업 발굴·연계 효율성 강화**

< 취업형 노인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강화 >



2 다양한 근무조건 · 직종의 민간일자리 활성화

○ **(탄력 일자리 발굴·확대) 노인의 특성·욕구**(근로능력, 희망시간 등) 반영하여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 확대 보급

* 근무일, 시간, 장소 등 전일제 상용직 대비 근무조건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예: 고객 집중 방문 시간대에 응대 업무 지원하는 서비스직 등)

- 전일제 근무보다 **시간제 근무를 선호**하는 **노년층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주 고용부담 해소

* 장래 근로를 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55.1%가 '시간제 근로' 희망('23, 통계청)

▸ **(예: T-플랫폼 물류 매니저) 노인일자리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6개소**에서 **주 15시간 내외**로 고객응대, 접수, 물품 보관·배송 등 **물류서비스 지원**('23~)

○ **(노인 전략직종 선정·보급) 기업 채용수요** 등을 고려해 근무조건이 우수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노인 전략직종**'으로 선정·보급

- 매해 전문기술과 지식분야, e커머스·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노인 전략직종 선정**하여 **시니어인턴십 중점 연계**

* (예)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4차산업(지식, 정보·통신), 첨단산업(컴퓨터, 신소재) 등

- **숙련기술직 은퇴자**를 **청년 멘토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하는 **세대통합형 일자리*** 확대 및 **직무모델 발굴 확대**

* (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검사원으로서 신규직원 대상 기술 전수(월평균 300만원)

< 취업현장 중심 적합 직무 개발(안) >

▶ **(고령자 근로욕구 파악)** 희망직종, 근로능력, 급여수준, 근로시간, 근로강도 등 근로욕구 파악

▶ **(노인 적합직무 발굴)** 산업구조 변화, 신노년세대 특성 등 반영한 민간일자리 분야 노인 적합직종 발굴

▶ **(취업현장 중심 직무분석)** 노인 적합직종과 연관성 높은 취업현장 대표, 현장책임자, 인사담당자 등으로 민간 협의체 구성·운영하여 **적합 직무 세부 분석**

▶ **(전략직종 선정)** 고령자 근로욕구, 노인 적합직종, 세부 직무분석 결과 토대로 전략직종 선정

3 창업형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 기반 마련

○ **(시장경쟁력 확보)** 시장형 사업단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지원 확대 및 수익성 검증 강화**

- **약자지원**(노인 일상생활 지원 등) 및 **발전가능성** 높은 사업에 대해 **상담·컨설팅, 초기투자비*** 등 지원하여 **신규 사업단 적극 육성**

  * 시장형 사업단 대상 공모를 통해 30개소 내외, 3.9억원 지원('22)

- 성과평가 **우수기관 대상 초기투자비 지원 공모 인센티브** 제공

< 성과평가 우수기관 초기투자비 공모 인센티브(안) >

구분	신규사업 초기투자비
상위 1% (4개소 내외)	공모 참여 시 초기투자비 지원
상위 10% (40개소 내외)	공모 참여 시 가점 부여

○ **(자립역량 강화)** 창업 준비 중인 수행기관에 대해 **지원 일몰**(예: 5년) 전제로 **초기투자비***를 지원하는 **'일몰자립제' 도입 검토**

  * 초기투자비(개소당 최대 3억원, 임대보증금 포함) 및 성장지원(창업준비 〉 기술인증 〉 디자인 〉 상품사업화 〉 판로개척)

- 자립 가능성 높은 **청·장년층, 기업 등 아이디어**에 노인일자리를 결합한 **'시장형 사업단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 시 초기투자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판로확보)** 시장형사업단 등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등 판로지원 확대**

- 공공배달앱, 오픈마켓 입점 및 판매 대행 등 **판매 채널 다양화, 민간기업과 연계한 매장 설립***(이마트, 홈플러스 등) 활성화

  * (기업) 매장 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 (지자체·공공기관 등) 시설투자비 등 사업지원

< 참고 > 우수사례 : 홈플러스 카페 마을('22.4)

구 분	내 용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 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설투자비(7천만원), 노인일자리 매칭 지원 등 사업 운영 지원
전주시	시설투자비(3천만원), 노인일자리 매칭 지원

- 노인생산품 **인증기준*** 수립, 인증제도 수행조직·인력 등 **인프라 확보**하여 **노인생산품 인증제도 마련** 검토

  * (예) 노인 근로자 수, 노인 고용 비율, 노인 생산 참여 시간, 직접 생산 여부 등

< 노인생산품 인증체계 운영계획(안) >

ㅇ **(주요내용)**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지원, 지정심사, 판매 활성화, 홍보 지원 ㅇ **주체별 역할: (중앙)**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수립 및 정책지원, 홍보 등 **(지역)** 노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및 판로확보, 교육, 사후관리 등

○ **(제도개선)** 시장형사업단에 대한 **충분한 초기지원**을 위해 **공익활동 이상 수준**으로 지원액 상향 검토(연 267만원 → 297만원)

- 역량·경험 많은 신노년세대 중심으로 시장경쟁력 높은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

  * (현행) 활동역량, 신체활동능력, 경력, 기초연금수급 여부 등 → (개선) **소득 관련 기준 축소**(저소득, 근로취약계층 등은 공익활동형으로 유도)

4 '진입부터 자립까지' 비즈니스 단계별 성장지원 서비스 강화

< 비즈니스 단계별 성장지원서비스 추진단계 >

준비단계	• 실무자 교육 지원 중심으로 사업 아이템 구체화 등 창업 준비 지원
설립단계	• 전문 경영자문단을 통해 수익성, 지속성 등 사업 적정성 검토 • 사업단 지원계획 수립
운영단계	• 전담 비즈니스 코치를 배치하여 경영전문 서비스 제공, 성장지원서비스 등 성장 기반 제공
	수익성, 지속성 등 사업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자립 및 지속성장 단계	• 전문가 멘토링 및 성장지원서비스 제공

○ **(비즈니스모델 검증 지원)** 경영지도사 등 지역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신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 지원**

  *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기타 유형 중 비즈니스 모델 검증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실시

< 신규 사업계획 심사 체계(안) >

사업계획 수립·등록	→	1차심사	→	2차심사	→	비즈니스모델 검증	→	3차심사
수행기관		시군구		시도		자문단		개발원

○ **(성장지원센터 기능 확대)** 신규 사업단에 전담 **비즈니스 코치를 지정**하여 **진입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밀착 지원 추진**

* 현 비즈니스모델 점검 자문단 인력풀 활용

- 신규 사업단, 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를 230건('22) → 1,000건('27)으로 확대하여 지원 강화

* (지원내용) 신규사업 비즈니스모델 검증 자문단 운영, 전담 비즈니스 코치 운영,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 등

- **시스템을 통해** 사업단의 성장단계별 **서비스 지원내용 이력 등을 관리**하여 **사업단 지원 지속성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

5 민간형 일자리 사업 개선 방향 검토

○ **(취업형 일자리 개편)** 향후 **사업 운영** 및 타 사업과의 연계·차별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시니어인턴십 등 **개편방안 연구 추진**

* (시니어인턴십 현황) ('18) 8천명 → ('23) 5.5만명으로 최근 5년간 약 7배 증가
(취업알선형 현황) ('18) 2.3만명 → ('23) 8.8만명으로 최근 5년간 약 4배 증가

○ **(고령자친화기업 내실화)** 사업 개편('23, 인증형 중심 운영) 이후 **지원 강화** 및 **제도 내실화 방향 모색**을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 재설계**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 내실화 방향(안) >

ㅇ **(지원 수준) 현행 채용 노인 1인당 500만 원 + '고령친화환경 투자비' 지원 신설** (기업별 추가채용 규모에 따라 최소 3천만원~최대 1억원) **추진, 홍보 지원**

ㅇ **(환류 체계)** 매년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선정 및 '재지정' 평가지표 개발 등

ㅇ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고령자친화기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추진**('24~)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1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

○ **(신규 진입 유도) 사회서비스 전문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적극적 연계를 통한 **신규 수행체계 발굴** 및 **진입 유인**

- 은퇴자 자조조직 등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 협동조합 등) 등이 **수행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참여자 중심 운영체계** 마련

* (예) 노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구성해 노인복지관 등 기존 수행기관을 거치지 않고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 **(수행기관 지원 확대) 수행기관 진입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투자비·인력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집중지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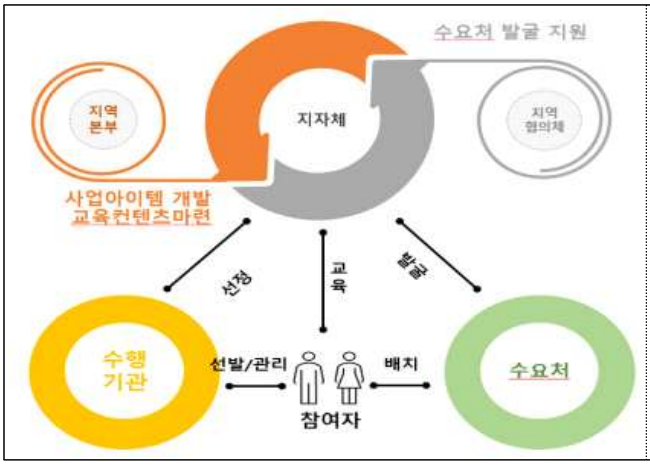
- **민간일자리의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가능성 향상**을 위해 순수 민간(개인, 법인 사업자 등)으로 수행기관 범위 확장 검토

2 지역 거버넌스 기반 수행체계 활성화

○ **(지역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자체 중심 사업운영 모형 도입**

- 지자체 재량 기반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일자리 시행계획'** 수립
-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등 **거버넌스 구조 조성**

< 지자체 중심형 사업 모형(안) >



▶ **(운영주체)** 지자체 및 지역협의체

▶ **(운영절차)** 익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계획' 마련 → 수행기관 선정→ 개별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 심의 → 참여자 선발 및 교육 → 사업 실시

▶ **(지자체 역할)** 매년 기본계획 수립, 신규 일자리 아이템 기획 및 발굴, 수행기관 사업량 배정 등

< 지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우수사례 >

▸ **(전주시 통합돌봄 서포터즈)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 결합,** 참여자-수행기관(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사업추진 주체(행정복지센터 돌봄 창구) 간 적극적 의사소통 및 연계 기반으로 운영과정 설계

* 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퇴자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연계하여 돌봄대상 어르신에게 상담, 돌봄, 생활지원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 및 추가 일자리 아이템 개발

○ **(지역별 지원체계 강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연계를 위한 **중앙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체계 강화**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역할·기능 강화**를 통해 **중앙 단위 정책**과 **광역 지자체를 연계**하는 핵심 역할 수행

  * 지역본부는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연계, 수행기관은 사업 운영 집중

3 담당자 · 수행기관 등 역량 강화

○ **(담당자 교육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사업 이해도·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 마련 및 **채용 기준** 개선

  * 사업 지침 체계화, 정기적 필수교육 및 실습교과 운영 등

- 연간 **정책방향 이해**, 참여자 욕구 분석·상담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정기 교육 확대**(유형별 집합 교육, 현장 간담회 등)

< 노인일자리 담당자 양성체계(안) >

구 분	현재		구축(안)
자격 요건	▸수행기관별 공고	➡	▸**담당자 최저 자격요건 준수*** + 수행기관별 공고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명시
양성체계	▸(채용 후) 개발원 필요과정 이수	➡	▸(채용 전 필수) **담당자 기초 교육과정 이수** ▸(채용 후 보수교육) **담당자 실습 교육과정 이수**

○ **(수행기관 역량 강화) 노인일자리 유형, 기관 경력 등**에 따른 필요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교육체계 설계***

  * (예) 기본직무과정(사업이해, 노인일자리 상담 등), 중급과정(사업개발, 참여노인 경력개발 서비스 전문과정) → 전문과정(기관운영, 미래대비 과정 등)

- 노인일자리 **우수·핵심기관** 대상으로 **대학을 연계**한 노인일자리 현장 전문가 양성* 등 **학계-현장 간 교류 지원**

  * 지자체 수행기관 재지정 시 '기관 전문성 평가항목' 등 연계

○ **(참여자 역량개발 지원) 체계적 교육훈련**으로 고용가능성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참여자 역량개발 지원 강화**

- **수행기관**을 통한 **참여자 상담·진단*** 및 **참여자 욕구·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역량개발 교육** 등 지원

  * 참여자 직무 이력, 역량 등 객관적 진단을 위한 상담도구 개발 등

< 노인일자리 참여자 역량개발 지원(안) >

일자리 진입기		일자리 활동기		전환기
· **(이력진단)** 자가진단,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 · **(맞춤상담·설계)** 기본 소양교육, 개인별 역량개발 설계	⇨	· **(일자리 연계)** 업무난이도, 적성 등 고려해 유형별 연계 · **(역량관리 등)** 참여자 이력관리, 만족도 등	⇨	**(재설계)** 업무난이도, 애로사항 진단 **(신규일자리 연계)** 재진입 가능한 일자리 교육 후 연계

- **대상자별** 일자리 참여이력 및 교육훈련, 자격증 등 **경력을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관리(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활용)

4 담당자 고용 안정성 및 처우개선

○ **(배치기준 완화)** 전문성 높은 노인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유형별 담당자 배치기준 완화** 검토

구분	'23년		'27년(검토안)
공익활동형	참여노인 140명당 1명	▶	참여노인 **120명**당 1명
사회서비스형	참여노인 100명당 1명		참여노인 **80명**당 1명
시장형사업단	참여노인 120명당 1명		참여노인 **80명**당 1명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은 **투입시간·난이도 감안**, 80명당 1명까지 단계적 조정

○ **(장기근속 유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경험·역량 축적**을 위해 **담당자 무기계약직 전환 유도 규정**(지침) 개선 및 평가 반영 등 추진

- 수행기관 평가 시 **무기계약직 전환 가점** 반영 및 **우수기관에 시상**·상금 수여(노인일자리 주간) 등 **인센티브 강화**

  *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자·수행기관 등에 장관표창 수여

○ **(경력인정) 노인일자리 사업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개정

  * (현행)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상 노인일자리 담당자 중 일부(노인일자리 지원기관)만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

5 안정적 제도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1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법 제정

◈ (법안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상임위 통과)
◈ (제정법 구성안) ①**총칙**(사업목적, 노인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등), ②**사업지원**(공공형·민간형 사업, 전담기관 근거 등), ③**기반조성**(교육, 홍보, 연구조사, 안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④**보칙**(자료요청, 부정수급 벌칙 등)

○ **(법체계 강화) 노인의 근로·사회활동 기회 확대** 및 노인의 **전문 지식,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 **법적 기반 마련**

○ **(안전 등 참여자 보호 강화)**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참여자 **상담 및 법률적 지원** 등 **공적 책임 강화**

○ **(정보 운영 근거 마련)** 대상자 고유식별번호 등 **정보수집** 및 **협업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로복지공단 등) **정보 처리·연계** 근거 명시

※ (예) (현행) 참여자 건강보험 자료요청 및 회신에 2주~1개월 소요, 일자리 중복참여 등 부정수급 발생 시 즉각 조치 지연 ⇒ (개선) 건강보험 직장가입 등 신청자 기본정보 즉시 연계

2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구축

○ **(패널조사 추진)** 노인일자리 **정책효과**(건강, 삶의 질 등) **변화 분석**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노인일자리 패널조사*' 실시**(60세 이상 6,000명)

* ('22) 패널 기초연구 → ('23) 예비조사(표본설계 및 조사표 개발 등) → ('24~) 본조사

-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삶의 변화 추적 관찰** 및 **시간적 흐름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 **(노인실태조사 연계 강화) 비참여자 분석**, 참여자-전체노인 간 비교 등을 위해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관련 조사항목 확대**

현행 *「2020년 노인실태조사」내 관련 문항	추가 확대(안) *「2023년 노인실태조사」 시 반영 추진
향후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 및 희망하는 노인일자리 유형	노인일자리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유** * (예) 일하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소득이 충분해서 등

○ **(국가승인통계 운영) 노인일자리 실태조사**(3년 단위)의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운영하여 노인일자리 데이터의 **신뢰성·대표성 확보**

3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 **(대국민 홍보 강화)** 캠페인* 등을 통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등 **노인일자리의 긍정적 측면 조명** 및 **국민과의 접점 확대**

* 정책 수용도 높일 수 있는 메시지 활용,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선제적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캠페인 빈도 확대·방식 다양화

- 노인일자리의 **다양한 사회적 효과**(노인 빈곤 감소,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해 **전 세대 공감대 형성** 유도

○ **(다양한 창구 활용)**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 적극 발굴 및 **다양한 매체* 활용하여 홍보**

* 기존 신문·TV·옥외매체 +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소통 매체 활용

홍보 타겟별 슬로건 (참여자, 국민, 기업 등 타겟 맞춤형)	**'22 정책캠페인 홍보**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일자리)	**유튜브 콘텐츠**

○ **(민간기업 등 대상 전략적 홍보)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한 수행기관·**기업 대상의 '찾아가는 설명회'·'온라인 설명회'** 등 추진

* 민간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기업관계자 활용 홍보, 참여기업과 홍보 협업 등

○ **(현장형 홍보 확대)** '사회참여 및 동기 충족' 등 **사회적 가치, 현장 효용성** 등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노력 강화***

* 현장에서의 경험, 사례 확산 위한 **지자체, 수행기관 등 자체 홍보 활성화**

4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관협력 강화

○ **(민관협력 모델 발굴)** 기업 ESG 경영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업 개발,** 역량 있는 협력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 확장**

* ①사회공헌 공급(기업·종교계 등)과 수요(지자체, 수행기관 등) 간 매칭 지원, ②우수 사회공헌 모델 확산, ③사회공헌 활동 홍보 등

- 전문역량 보유 노인에게 적합한 직무 분야 발굴 및 **기업의 고유 사업 연계**를 위한 기업-복지부(개발원) 간 **MOU 활성화**

○ **(사회적 확산 도모)** 사회공헌 기관, 우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포상 확대** 및 **민관협력 사례 적극 홍보**

- **사회공헌 활동 현장**에 장·차관 등 방문 및 **민관 공동 홍보*** 추진

* 정부 인사와 기업 총수가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하는 이벤트 등

5 참여자 및 수행기관 등 안전관리 강화

○ **(참여자·수행기관 안전관리 지원)** 상해보험 보장내용 확대, 안전 관련 공공기관 협업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

- 복수 보험사 선정 및 보험사 간 경쟁 유도, **보험 보장범위 확대** 및 **특약 추가 구성** 등

- 수행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역량 강화** 및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협업 확대 추진**

○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

- 시니어컨설턴트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정보제공, 교육**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 **'중대재해 네트워크'** 활용하여 동종업계의 **실시간 중대재해 발생 상황** 및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예방자료 공유·확산**

참고1 세부 추진과제 및 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전략 1]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1 수요에 대응하는 공익활동형 일자리 운영		-
- 저소득·고령층 소득보장 요구에 지속 대응		'24~
- 수요 특성을 반영한 선발·배분 기준 마련		'24~
2 공익활동형 질적 내실화		-
- 정책목표·대상 중심으로 세부 유형 재편		'24~
- 공익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계속
[전략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1 사회서비스형 비중 확대 및 제도 개편		'24~
2 지역 문제해결 등 사회서비스 신규영역 발굴		계속
3 민·관 협력형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활성화		'23~
4 참여자 직무교육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공급 역량 강화		'24~
[전략 3] 민간형 취·창업 지원 강화		
1 민간기업·구직노인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 강화		'23~
2 다양한 근무조건·직종의 민간일자리 활성화		'24~
3 창업형 시장경쟁력 확보 및 자립 기반 마련		'23~
4 비즈니스 단계별 성장지원 서비스 강화		'24~
5 민간형 일자리 사업 개선 방향 검토		'24~
[전략 4]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		
1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수행기관 다변화		'23~
2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수행체계 활성화		'24~
3 담당자·수행기관 등 역량 강화		'24~
4 담당자 고용 안정성 및 처우개선		'24~
[전략 5] 안정적 제도기반 구축 및 인식 제고		
1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법 제정		'23~
2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구축		'23~
3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23~
4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등 민관협력 강화		'23~
5 참여자 및 수행기관 등 안전관리 강화		'23~

참고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04년~, 노인복지법 제23조)

□ (규모/예산) 88만 3,000명 / 1조 5,400억 원 ('23년)

◆ **(노인일자리 수)** ('04) 2.5만 명 → ('17) 47만 명 → **('23) 88.3만 명**
◆ **(노인일자리 예산)** ('04) 212억 원→ ('17) 5,231억 원 → **('23) 1조 5,400억 원**(국비 기준)

□ (전달체계) 지자체보조(서울 30%, 지방 50%),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 (수행기관) 전국 1,300개 수행기관이 평균 585개 일자리 담당('22년 말)

* 노인복지관(279개)·대한노인회(205개)·노인일자리지원기관(203개)·지자체(138개) 등

□ 사업유형 및 세부 내용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	-	883	-	-
공익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608	30 (3시간, 10일)	월 27만 원 (11개월)
사회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80	60 (3시간, 20일)	월 71.2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5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사회서비스형 이상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60세 이상	45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88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10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55	기업에 최대 240만원(월40만원*6개월)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기업에 지원	